규범권력과 유럽연합:
새로운 국제정치 행위자의 등장?

김준석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다음의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현저하게 강화되고 있는 국제정치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역할과 위상을 이해하기 위한 유력한 접근법으로서 규범권력(normative power) 개념에 주목할 것
을 제안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국제정치의 풍에서 장차 어떤 모습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규범권력 개념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통상적인 권력 추구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민주주의 연대 등의 규범을 확산하고 전파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의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국제정치적 정체성의 기반으로서 규범권력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규범권력 개념에 보다 일반적 차원에서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이 유력한 분석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주제어: 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 규범권력, 도구적 합리성, 사회 구성주의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I. 문제의 제기

탈냉전 시대 들어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유럽 국가들이 경제,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을 넘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2003년 12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더 나은 세계에서 안전한 유럽(A Secure Europe in a Better World)”이라는 제목의 유럽 공동의 안보전략을 채택한 사실은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의 진전을 통해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이 장차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지의 문제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최소한에 그치려라 예상하는 이들은 대다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여전히 외교-안보 정책을 국가주권의 최후 보루로 여기고 있다는 점. 또 많은 회원국들의 군사비 지출이 경제력에 걸 맞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여기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문제를 두고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점.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 형태의 정체(政體)가 국제정치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가능한 역사적 선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 역시 의문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반해 역할 증대를 예상하는 이들은 국제적으로 주요한 이슈에 관한 미국과 유럽연합 간 입장 차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 북아프리카, 중동 등 인근지역에서도 정세불안이 유럽의 안보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정치체제의 무정부성이 계속되는 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협의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다음의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의문과 긍정론의 이분법을 넘어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등장을 이해할 것을 제안한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히 다음의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일부 유럽연합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규범권력(normative power)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 개념의 지지자들은 유럽연합을 군사력과 경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통상적인 권력 추구와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일련의 규범을 전파하고 확산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존재로 이해한다. 이들에 따르면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정체성은 이와 같이 자발적이고 비도구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행위패턴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문제는 규범권력에 관한 기존 논의들이 행위패턴의 서술과 설명에 집중할 뿐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궁극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규범의 전파와 확산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심을 역사적으로 특수한, 따라서 쉽게 일반화되기 힘든 이타심의 발현으로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의 논문에서는 규범권력의 이론적 기초를 시론(試論)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우선 제2절에서는 1990년대 이후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역할이 증대되어 온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통상적인 시각에서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들을 지적한다. 제3절에서는 유럽연합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규범권력 개념을 소개하고 이 개념의 유용성과 한계를 동시에 지적한다. 마지막 제4절에서는 규범권력 개념을 경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기존 국제정치학 이론에 고유한 도구합리성의 가정을 효과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모색한다. 이 절에서는 특히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의사소통 행위이론(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이 이러한 대안적 틀로 가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II. 새로운 국제정치행위자로서의 유럽연합

1991년 체결된 마스터리히트 조약에서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Security Policy, CFSP)이 이전의 유럽정치협력(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EPC)을 대체하기로 결정되면서 유럽연합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오랜 기간 담보 상태에 머물러 오던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와 같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주로 다음의 이유이다. 우선 냉전의 종식으로 초래된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가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적이었던 안보환경을 재고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양극화된 냉전질서는 엄청난 잠재적 위험성과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 반면 행위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상호작용 패턴의 정형화를 가져올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체제였다. 이 질서의 종결으로 그러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 독일 통일로 촉발된 지역 질서의 변화와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 인종분규 등 새로운 불안정 요인의 등장은 유럽 제 국가들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 말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통화의 창설에 힘입은 이래 정치통합에 상응하는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 시작했고, 정치통합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CFSP는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White, 2001: 95-96; Maull, 2005: 775-776).

규범권력과 유럽연합


문제는 이와 같은 독자적인 행보를 국제정치 무대에서 유럽연합의 독립적인 행위자로서의 자리매김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가장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은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철저를 거쳐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과 일관 채택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단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Bretherton and Vogler, 2006: 9-10). 하지만 유럽연합이 이러한 기준을 어느정도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관한 견해는 현재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신현실주의의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보면 주권 국가들의 협력체로서의 유럽연합은 결코 독립적인 행위자로 간주될 수 없다. 사실 대부분의 신현실주의자들은 유럽통합 현상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무정부적인 국제정치체제 하에서 주권 국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고, 생존이 각 국가의 지상과제로 남아있는 한 이 체계의 성격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유럽통합은 경제, 사회 분야에 국한된 현상이고, 이들 분야에서의 통합이 정치, 외교,
국방 동 전통적으로 국가의 독립적인 지위 보존에 핵심적이라 여겨지는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통합이 국제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럽연합이 기존의 국가중심 국제체제에로 “사회화(socialize)”되는 것뿐이다. 즉 유럽연합은 스스로가 주권국가화(化)됨으로써만 독립적인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Collard-Wexler, 2006: 413).


하지만 이와 같은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몇몇 현실주의 국제정 치학자들은 유럽연합이 오늘날 국제정치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한 사실이 전통적인 현실주의의 기본전제와 이론적으로 불일치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 중요한 과제는 그러한 불일치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배리 포젠(Barry R. Posen) 등에 의하면 ESDP 등 유럽 국가들의 독자노선 추구는 미국 주도의 단극질서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견제 내지는 세력균형의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들 국가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양자 간 관계의 균열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포젠(Posen, 2006: 155)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패턴은 궁극적으로 국제정치 체제의 구조적 무정부성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1\)

결국 신 현실주의의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유럽연합은 국가를 유일하게 의미 있는 행위자로 간주하는 관점을 고수하는 경우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유형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우에 는 체제의 구조적 요구에 전통적인 국가행위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방식이 그려내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실제 ‘ 현실은 보다 복잡하고 복합적이며, 따라서 일관적인 성격규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 수밖에 없다. 의심할 나위 없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쉽게 정의되기 매우 힘든 정체(政體)로 남아있다는 데 있다.

현재 많은 이들은 유럽통합이 궁극적으로 ‘유럽 연방’ 내지는 ‘유럽 합중국’의 탄생으로 이어지리라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비준거부로 유럽연합 헌법을 제정하려는 아십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986년 유럽단일의정서가 채택된 이래로 유 지되어온 통합의 모멘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보기는 힘들다. 사실, 앤드루 모라브칙(Andrew Moravcsik, 2001: 166-167) 등이 지적했듯이, 유럽통합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들은 조세제도와 복지제도, 교육문제 등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영역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즉, 흔히 생각되는 것과는 달리, 유럽통합이 주권국가의 총체적인 위상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각국의 정치. 경제 앨리트들은 통합의 범위와 강도를 심화시키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보다 회의적인 혹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1\) ESDP의 의의에 관한 포젠과 반대되는 현실주의의 국제정치학자의 견해를 위해서는 Brooks and Wohlforth(2005: 91-93)을 참조하시오. 브룩스와 울포스에 따르면 ESDP는 미국과 유럽국가들 간의 동맹을 보완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사실 역시 기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유럽연합이 달성할 수 있는 통합의 최대치는 통상적인 의미의 연방국가(federal state)가 아닌 국가연합(confederation) 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체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계를 받아들이는 경우 우리는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위상이 현실주의자들의 예측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을리라 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는 국제정치의 장에서 유럽연합의 행위패턴이 기존 주권국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통합의 지속적인 진전을 가로막는 몇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끝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교·안보 분야는 유럽연합의 많은 이슈영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제도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이론적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의 조직원리가 가장 고전적으로 적응되는 분야로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혼히 통합의 척도로 간주되는 기중다수결투표제(qualified majority voting)는 공동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 기구인 GAERC(Gener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Council)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핵심적인 국가이익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럽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Vanhoonacker, 2005: 82-83).

다음으로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각 회원국 정부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 내의 전통적인 강대국들, 즉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유럽연합 내에 독자적인 유럽 외교·안보 정책 계획 자체에 완전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덴마크, 체코, 멜량, 스웨덴과 같은 분쟁지역의 정책 같은 경우, 국가이익의 극단적인 지지를 계속 유지하기 원한 이달랜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몰타 그리고 스웨덴, 그리고 바르바로 조약기구의 일원으로 서유럽 국가들과 정치·군사적으로 오랜 기간 대립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그야말로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입장을 지닌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Salmon, 2005: 374-375). 이들 국가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국제정치적 위협요인의 성격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는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위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CFSP, ESDP 등 유럽연합 차원의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의 지지여부를 두고 유럽 국가들 간 입장차이가 점차하게 표출되었던 바로 그해 12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안보전략에 서명함으로써 협력의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연합을 국제정치체계의 구조적 측면에 반응하는 독립적인 국제정치 행위자로 파악하는 포젠 등의 주장은 일정한 설득력을 지니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제도적으로, 또 구성원의 다양성에서 유럽연합을 일반적인 의미의 국제정치 행위자로 분류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 존재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연합은 무정부적인 조직원리와 위계적인 조직원리가 복합적으로 혼재된 형태의 정체로 정의될 수 있다(Simon Collard-Wexler, 2006: 398).

그렇다면 우리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유럽연합의 위상을 어떤 식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까? 상호모순적인 현실 속에서 유럽연합을 독자적인 국제정치 행위자로 정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답변을 시도하지 않는다. 사실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 역할과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기까지는 엄마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 논문에서 필자는 유럽연합이 일정한 영역에서 통상적인 권력정치를 추구하는 주권국가들과는 매우 상이한 행위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는 일부 유럽연합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범권력(normative power) 개념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행위 패턴의 일반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I. 규범적 행위자로서의 유럽연합

최근 들어 구미 정치학자들 사이에 국제정치의 장에서 이념 혹은 문화적 매개체를 통해 행사되는 권력의 작동방식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조지프 나이(Joseph Nye Jr.)는 그의 잘 알려진 연결권력(soft power) 개념을 통해 군사력과 경제력 이외에도 국가가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의 방식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나이(2004: 5-11)에 따르면 연결권력은 강압적인 수단이나 경제적인 유인책을 통해서 행사되는 경성권력(hard power)과는 달리 권력행사자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상대방의 사고, 취향, 의견을 형성함으로써 행사되는 권력을 의미한다. 마이클 바넷(Michael Barnett)과 레이먼 듀발(Raymond Duvall) 역시 최근 한 논문에서 생산적 권력(productive power) 개념을 제시하면서 나이와 유사한 주장을 개진하였다. 생산적 권력은 당론과 의미, 지식체계를 통제함으로써 상대방 혹은 상대국의 사회적 정체성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 바넷과 듀발(2005: 55-57)의 표현에 따르면 "주체의 당론적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한다.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권력의 이념적, 문화적 측면을 조명하려는 시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의 장에서 유럽연합의 위상은 이러한 연결권력적 측면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찍이 프랑스의 정치학자 프랑수아 드蛐(Édouard Duchêne, 1973: 19-20)은 1973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유럽은 역사상 처음으로 소국기에 처한 세력균형의 주요 중심부가 정치문명(political civilization)의 새로운 장을 여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유럽 공동체 회원국들은 국제정치의 장을 "국내화(domesticate)"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Nicolaidis and Howse, 2002: 770; Whitman, 2006: 3에서 재인용). 이는 양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치유하고 갈등과 대립의 전통적인 국제관계를 넘어 평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성공한 유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비군사적, 비강압적 방식으로 세계 다른 지역으로 전파 내지는 보편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몽적 전환’의 과제가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공동체의 힘의 원천이자 정체성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민먼은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권력행사 방식을 “민간권력(civilian power)”으로 정의하였다.

2002년 영국의 정치학자 이안 매너스(Ian Manners)가 제안한 규범권력(normative power) 개념은 민간권력의 이념적, 규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너스(2002: 253)의 정의에 따르면 규범권력은 국제정치의 장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을 위해 “무엇이 표준이 될 수 있는지를 재정의(redefine what can be normal)”함으로써 그들의 행위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유럽연합은 이 규범권력이 통용되는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다른 어떤 지역,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유럽연합이 보편적인 정치적, 사회적 규범들과 가치들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너스(2002: 242-244)는 다섯 가지 핵심적인 규범들-국가들 간 평화의 유지, 자유 이념의 실현,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존중과 보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네 가지 규범들-사회적 연대, 민족이나 종교, 인종 등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반대, 지속 가능한 개발, 효과적인 통치체제의 확립-을 제시하고 있다.

규범권력 개념에서 강조되어야 할 가자는 권력 행사자가 일정한 규범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러한 규범의 ‘모범적인’ 구현자 내지는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혹은 적어도 다른 행위자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규범권력은 오직 모범을 보임으로써만 혹은 모범적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한에서만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권력이다. 매너스 (2002: 252)의 표현을 빌리면 “유럽연합의 국제적 역할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을 하는가 혹은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의 문제이다.”

2. ‘민간권력’이라는 번역은 civilian power의 의미를 원전하게 전달하는 못하고 있다. civil이라는 단어가 civil 혹은 non-military, 즉 비군사적이라는 의미와 civilizing, 교화, 문명화의 의미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범권력 개념은 이와 같이 전통적인 권력정치의 분석틀로는 미처 파악되지 않는 유럽연합의 행위패턴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규범권력 개념에 대한 비판이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매너스(2002: 253) 스스로 인정하고 규범권력 개

4. 그밖에도 유사한 맥락에서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에 유럽식 사회적 시민권(European social citizenship)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규범을 전파하려는 유럽연합의 시도를 규범권력 행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Grugel, 2007).
범권과 유럽연합

례은 일종의 “문화제국주의”로, 혹은 서구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두 “문명화 사명(mission civilisatrice)”의 한 형태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자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이 매너가 열거하고 있는 규범과 가치들을 스스로 온전하게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즉 유럽연합이 ‘충분히 모범적이지 못하다는 비판 역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극우정치세력의 부상. 이슬람계 이민자들에 대한 유형, 무형의 차별, 이에 따른 인종폭동의 발생. 그리고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기존 회원국들의 이중적인 태도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터키의 가입문제는 단지로 벌어진 논란(그리고 2006년 말 터키와의 가입협상을 전둔하기로 결정한 유럽연합의 결정은)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확대를 규범의 확산과 동일시하여 가입 협약이 유럽 공동의 규범을 수용하는 경우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 대신6 정차 서구 기독교 전통에 근거한 베타적 정체성의 확립을 시도하는 것이 아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Diez, 2005; Rumelili, 2004; Hurd, 2006).

그밖에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2003년 유럽안보전략 선언과 신속대응군 창설 계획 등으로 구체화된 유럽연합 차원의 안보협력 강화 노력이 비군사적, 비강압적인 방식의 설득과 교화를 수단으로 하는 규범권력의 행사와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 역시 제기될 수 있다(Manners, 2006: 188-93).7 하

5. 1999년 오스트리아에서 실시된 선거 결과 외로그 하이데(Jörg Haider)가 이끄는 극우성향의 자유당(FPO)이 우파정단인 오스트리아 인민당(OVP)이 주도하는 정부에 연정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유럽연합의 여타 14개국은 민주주의 원칙의 손상 을 이유로 오스트리아 정부에 대한 제재를 결의하였다. 만일 제재가 성공을 거두었다면 이는 경제적 동기뿐 아니라 정치적 원칙에 기초한 유럽연합의 탄생을 일리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의 협력하는 이해관계와 다른 회원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이유가 맞물리면서 제재 시도는 흐지부지되었고, 오히려 유럽연합이 "엄격하게 관리에 규정된 초국가적 권리공동체"를 넘어서는 가치와 규범의 공동체로 진화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만이 입증되었다(Leconte, 2005: 636).

6. 1993년 합의된 이른바 코펜하겐 기준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1) 인권을 존중하고 범죄주의를 보장하는, 민주적, 종교적, 정치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체제적 인권의 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2) 유럽연합 내에서의 경제적 입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잘 기능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3) acquis communautaire로 알려진 기존 유럽연합의 법과 규칙, 절차, 표준 등을 수용하고 준수해야 한다.

7. 물론 군사적력의 확대는 규범권력의 행사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규범권력 개념의 유용성이 잠식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헬렌 스저센(Helene Sjursen) 등이 지적하여, 이 권력의 존립근거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규범의 전파를 통한 방식이 현세에 부딪혔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유럽인도전략은 군사협력의 전략적 목표들 중 하나를 효과적인 다자주의(effective multilateralism)에 기초를 둔 국제질서의 창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이 스스로의 이미지에 따라 국제관계를 형성하려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규범권력 행사의 한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Whitman, 2006: 9-10).
럽 국가들이 "탈근대적 국제정치의 낙원"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 오직 미국의 군사적 뒷받침이 계속되는 한 가능하고, 따라서 규범권력 개념은 유럽 국가들의 군사적 허약성 혹은 군사적 건설에 충분한 자원을 투여하려는 유럽인들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일 뿐이라는 비판 역시 제기될 수 있다.


매너스는 규범권력의 독자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매너스(2002: 252-253)는 국제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이 어떤 종류의 물질적 이득에 대한 계산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와의 비판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이러한 노력은 문화적 오만의 결과로, 책임isEqualTo 시도의 일환으로, 아니면 이기적인 자기아이익 추구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들에 직면하여 규범권력 개념의 유용성을 우호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사실 규범권력 개념의 취약성은 너무나 명백해서 많은 이들은 이 개념에 엄밀한 사회과학이론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 개념에 주목하는 것은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규범 정향성이 이면의 동기나 잠재적인 이해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동력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보다 적극적으로 규범권력 행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사회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통해 그러한
'진정성'을 보다 일반화된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이론들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IV. 이론적 기초의 모색: 시론(試論)

다른 행위자들을 위해 어떤 가치 기준이 정상적이거나 혹은 규범적임지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하는 규범권력 개념을 국제정치이론의 틀 속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의 관점에 효과적인 도전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다소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국제정치학에서 도구적 합리성은 국제체제 내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결과 지향적(outcome-oriented)인 행위패턴을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정치행위자들의 행위패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는 이기적인 자기이익(selfish self-interest)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자들의 궁극적인 동기나 의도에 주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자기이익은 주로 경제적인 이윤이나 안보상황의 개선과 같은 물질적인 차원의 이득과 보상의 실현으로 정의된다.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의 개념을 둘러싸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진영 간에 전개된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양진영의 이론적 입장은 모두 이와 같은 도구적 합리성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도구적 합리성의 시각에서 보면 규범권력 개념은 단순히 명백하다. 이 권력은 행해지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행위패턴 그 자체나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장당화의 논리에는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없고 대신 그 이면에 농어있는 자기 이익 극대화의 논리, 예를 들면 인권의 증진을 통해 정당적인 안보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동기 등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에 대해 두 가지 정도의 반론이 가능하다.

우선 도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자기이익의 개념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기이익이 반드시 계산적이고 이기적
규범권력과 유럽연합


물론 인간의 이기심에 관한 오래되고 뿌리 깊은 관념을 공유하고 있는 도구적 합리주의자들은 규범적 행위의 무조건성, 현재지향성에 관한 이러한 주장에 쉽게 수긍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자기이익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사회 규범의 준수가 가능하고, 따라서 그러한 이익에 배치되거나 벌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규범은 언제든지 포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엘스터의 표현을 벌리자면 규범적 행위는 택시를 마음대로 잡아타고 내리듯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취사선정될 수 없다. 만약 어떤 행위자가 사회적 규범에 대해 그렇게 도구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취한다면 그는 얼마만큼 정당적인 사회적 삼을 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차桎게 될 것이다(Elster, 1989: 106).

엘스터가 규범적 행위를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보는 반면 국제정치학의
구성주의 이론은 국제정치 영역에서 규범의 존재에 관해 보다 ‘사회화된’ 설명을 제공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규범은 행위자들이 현실을 해석하고 정의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필수적인 준거들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행위자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규범을 준수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이기적인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많은 국가들이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 중 하나인 주권(sovereignty)의 원칙을 반복하게 위반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국제규범으로서 주권원칙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Philpott, 2001: 310). 사회적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스탠더드로서 규범은 준수와 위반의 여부를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규범의 존재감 혹은 중요성은 그 규범이 위반되었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성주의자들이 국제정치에서 독립적인 규범구조(normative structure)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daher이다.

결국 한편으로는 이기성의 가정을 넘어 자기이익의 개념적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규범의 구속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함으로써 도구적 합리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자기이익의 이기성을 근거로 규범권력 개념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입장을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을 포함적으로 정의되는 자기이익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일반 폐지 규범의 전파와 확산이라는 목표가 설정되면 애초의 동기가 유럽 국가들에 유리한 국제관계의 조성과 같은 이기적인 자기이익의 추구에 있었다 하더라도 논다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러한 목표를 희생하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함으로써 규범권력의 존재를 이면의 동기나 의도로 환원시키는 설명방식의 타당성을 반박할 수 있다. 혹은 보다 일반적인 차원
에서 규범구조의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유럽연합이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 고려해야 할 독자적인 행위기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규범권력 개념이 보다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dan손히 도구적 합리성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과 같은 조직메가
규범의 전파와 확산에 대한 일관된 정향성을 지니게 되는 과정을 보다 설득
력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구성주의의 이론은 이
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이론이
주로 규범의 준수를 통한 국제적 규범구조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강조하면서
서로운 규범이 처음 등장하고 전파되는 과정에 상대적으로 덜 주의를 기울여
계를 결속시키는가”(what makes the world hang together)”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데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구성주의자들은 규범의 생성과 확산에 관한 나름의 설명을 시
도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국제관계의 정에서 새로운 규범을 처음 제시하
고 전파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는 “규범 기업가(norm
trepreneur)”나 불리는 소수의 백제주의적인 운동가들과 그들이 주도하는
비영리기구(NGO)들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19세기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은
행가 앙리 둔담(Henri Dunant)과 그가 설립한 국제적십자사는 전쟁 도중 의
료 인력과 부상자에 대한 공격을 삼가야 한다는 국제규범을 처음 주장했고,
또 그러한 규범을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Finnemore and
국가들로 이루어진 조직 혹은 집단이 지속적으로 규범을 전파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현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이 되기는 어렵다. 규범 기업가들이나
그들이 이끄는 조직의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동의 책임”으로
표출되는 이타심의 발현으로 봐서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Finnemore
and Sikkink, 1998: 896). 물론 규범권력 역시 일정 부분 이타심이 발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이타심은 몇몇 개인이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자발적인 이타심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혹은 국가군(群) 차원에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발휘되는 이타심이다. 이와 같이 집단적인 혹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이타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의 견해로는, 독일의 사회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이 규범권력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Sjursen, 2006: 242-44; Lerch and Schwellnus, 2006). 최근 들어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이 의해 국제정치학과의 접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은 사회 내에서 인간의 행동을 추동하는 동기와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9 하버마스는,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사회 속에서 행위자가 사실의 인과관계나 규범의 타당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사회 행위자가 자신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도구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주의와 주장, 신념과 견해가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관심을 가짐을 의미한다.

하버마스(Habermas, 2006: 57)는 사회 행위자의 보편성 확보 노력이 그가 “논증(Argumentation)”이라 부르는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논증은 “참여자들이 문제가 되는 타당성 주장을 주제화하고 그것을 논거를 통해서 못받침하든가 혹은 비판하려고 시도하는 대화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논증은 행위자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다. 논증은 참가자들이 서로의 관점을 다른 이들에게 강제하려 하는 대신 순수하게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가장 큰 설득력을 지닌다. 즉 논증적으로 가장 우월한 견해에 관한 공동의 합의, 공동의 이해에 도달해 나가는 과정이다. 중요한 사실은 논증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정당화 과정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적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들이 필요적으로 전제해야 할 이상적인 조건에 가깝다는 점이다. 자신의 관점에 보편적인 타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들은 모든 권력 관계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의 과정에 대한 본원적인 지향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하버마스(2006: 426)에 의하면 논증을 통한 공동 이해의 창출은 의사소통행위 자체에 내재한 “목적인(目的因, telos)”이다.

결국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 하버마스는 사회 내의 인간이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다른 이들과의 공정한 대화를 통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존재임을 입증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단순화시켜 보면 하버마스는 인간이 자신의 관점을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편화시키려는 열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열망을 지니고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이 물질적인 이익이나 정치권력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는 인간의 모습만큼이나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10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의사소통행위이론과 규범권력 개념 간의 관련성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일단 토마스 리세(Thomas Risse, 2000: 14-16)가 지적하듯이 우리는 국제정치의 장을 단순히 무정부 상태로 정의하는 대신 행위자들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에 국가들 간, 시민들 간 상호교류의 증가와 정보통신 혁명은 이와 같은 국제관계의 ‘사회적’ 측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유럽연합의 규범권력 행사를 국제정치 행위자에 의한 의사소통행위의 일종으로 조심스럽게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국제정치 행위자들을 위해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려 시도하는 유럽연합의 행동패턴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규범에 보편적인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

10. 많은 이들에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은 자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주장으로 비춰질 것이다. 특히 하버마스가 자신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보편화용론(universal pragmatics)과 같은 언어이론은 의사소통행위 이론의 비현실성을 위한 인상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사고의 폭을 넓혀보면 하버마스 이론의 지극히 현실적인 측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모욕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상처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 속에는 모욕 행위의 부당성을 보다 일반적인 처럼에서 입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 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느끼는 분노가 순전히 주관적인 감정의 표출에 그치지 않고 객관화되기며, 어느 정도의 ‘보편적 타당성’을 획득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Habermas, 1990: 48-50).
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보편성에의 동기는 물질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추구뿐만이나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동기임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시황제도 폐지를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을 예로 들어보자. 그러한 노력이 부분적으로나마 인권의 향상과 안보상황의 개선을 도구적으로 연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황제도의 부당성에 관한 규범이 유럽 내외의 가치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지역에서 보편성을 획득하기를 바라는 유럽연합의 관심 또한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하버마스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관심은 단순히 주관적인 이탈심의 범위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러한 관심은 국제정치의 향상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넘어 포괄적인 합리성을 실현하려는 모든 행위자들의 행동패턴에 고유한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즉 규범권력은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경제성에 필수적인 구성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 규범권력 개념을 이해하려 시도하는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버마스가 자신의 이론을 전환론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모든 사회 행위자들이 의사소통적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일정 수준 이상의 윤리적, 규범적 기준에 도달한 행위자, 하버마스(1990: 124-125)가 “보편적 윤리 원칙의 단계”라 부르는 수준에 도달한 행위자만이 의사소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포괄적 합리성을 지닐 수 있다. 이 단계로 가장 진전된 단계의 행위자들은 이러한 근사멘체이 덜 다듬어진 윤리적 기준 재편 보다 널리 퍼져있고 보편화될 수 있는 기준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행동하려 노력한다.

하버마스(1979: 117)는 사회 행위자의 도덕적 진화가 자체의 고유한 발전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은 경제적, 정치적 상황 변화와 같은 외적인 발전의 결과로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덜 성숙되고, 경제적으로 덜 부유한 사회의 구성원도 의사소통적 행위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보편적 윤리원칙의 단계”에 도달한 행위자는 서구 사회. 특히 1945년 이후 서유럽 사회의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보편성에 관한 그 모든 담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서구 중심적 사고를 노정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버마스의 도덕 진화론은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Whitton, 1992: 308-312).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이와 같은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행위이론과 규범권력 개념의 접목을 위해서 하버마스 이론의 진화론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규범권력 개념이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균질적으로 국제관계 혹은 국제사회의 진화 가능성이 대한 진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규범권력 개념이 의미 있는 분석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다른’ 종류의 국제정치 행위자가 뿐만 아니라 보다 ‘발전된’ 혹은 보다 ‘성숙된’ 형태의 행위자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규범적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진보’가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한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앞 절에서 지적했듯이 규범권력 담론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 여전히 전통적인 행위패턴을 고수하고 있는 다른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유럽연합의 ‘진보’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한적으로나마 현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보다 성숙한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길에 들어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미 유럽의 국가들은 1945년 이후 역사상 전례 없이 평화롭고 협력적인 국제관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경험을 세계 다른 지역,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도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보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면서 통상적인 분석틀을 고수할 경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추상성과 그에 따른 구체성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행위와 사회의 도덕적 진화에 관한 하버마스의 논의에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사소통행위이론을 국제정치학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에서는 하버마스 이론의 진화론적인 측면에 관한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2. 유사한 맥락에서 피터 롤러(Peter Lawler)는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 대한 도덕적 의
V. 결론

이상의 논문에서 필자는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위상과 역할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근 들어 일부 유럽연합 연구자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범권력 개념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려 시도하였다. 필자는 또한 규범권력 개념이 보다 높은 수준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범의 전파와 확산에 대해 유럽연합이 지니는 관심의 진정성을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에서 지배적인 도구적 현실성의 가정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특히 필자는 성숙한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유럽연합이 규범의 국제적 전파와 확산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다 잘 인식하기 위해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주목하였다.

물론 필자가 논리의 여지가 많은 의사소통행위이론의 모든 개념적 장치들을 규범권력 이론에 엮히게 적용시킬 것을 제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하버마스의 이론은 규범권력 개념에 대해, 그리고 국제정치학이론 일반에 대해, 일종의 '자기발견적 모델(heuristic model)'로 간주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성숙함에 대한 절이 유럽연합 혹은 유럽 문명의 도덕적, 규범적 성취에 대한 일관적인 지지로 해석될 필요도 없다. 다만 필자는 현재 유럽대륙에서 국제정치질서의 재편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변화의 폭과 깊이가 전통적인 분석틀로부터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근본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 소장 연구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제정치의 장에서 유럽연합은 "세계 정치의 대안적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견본(an exemplar of what might “be otherwise” in world politics)"으로 이해될 수 있다(Rosamond, 2005: 478).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등장과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유력한 분석틀로서 규범권력론은 비유럽인들의 입장에서도 한번쯤 진지하게 숙고할 가치가 충분한 대상으로 보인다. 그들 중 대다수가 속해있고 또 당연히하고 있는 근대적 국제정치질서는 정직 그 사원(始原地)라 할 수 있는 유럽대륙에서 점차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Normative Power and the European Union:
A New Actor in World Politics?

Joon Suk Kim
Senior Researcher,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ollowing paper proposes to pay attention to the concept of normative power as a conceptual tool to understand the ways in which the European Union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actor in world politics since the 1990s. While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with regard to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oordin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it still remains very difficult to predict the overall shape of the EU as international actor. The concept of normative power can help highlight the fact that the EU, apart from engaging in conventional power politics, has been showing interest in propagating norms and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to other countries and regions. The following paper also points to the need for a theoretical framework with the help of which the concept can be made more persuasive, suggesting that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y Jürgen Habermas might play such a role.

Key Words: European Union,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normative power, instrumental rationality, social constructivism, Jürgen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